

## 특집

## DMZ 접경지역과 북한의 전후 복구

한모니까 (서울대)

## 국문요약

이 글은 DMZ 접경지역 중 북한 지역에 대한 연구이다. DMZ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대상을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고, 1950년대 북측 접경지역의 형성과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대 북한 신문과 미군노획 북한 문서, 농업 협동화 총결 자료, 정전협정 지도 등을 교차 분석하였다.

북측 DMZ 접경지역의 형성은 한국전쟁 전시 경험과 전후 복구라는 내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북한은 정전을 북한의 승리이자 평화의 첫 단계라고 평가하고 정전의 공고화를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선전 구호라기보다는 전시 북한이 입은 막대한 피해의 반증이었으며, 전시 피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다. 둘째, 북한은 확정된 군사분계선과 전선에 동원되었던 주민들을 ‘승리’와 ‘영웅’ 등으로 강조했는데, 이를 민심 수습과 접경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활용하고자 했다. 셋째, 북한 접경지역의 농업 협동화는 소련의 꼴호즈가 모델이 되기는 했으나, 전시 전선 원호 사업 및 관련 조직 경험에 직접적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전시 이 일대 주민의 영농과 전투 지원 동시 수행 경험은 전후 농업 협동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둘째와 셋째 특징은 북한이 점령한 서부 접경지역(‘신해방지구’)보다는 남한에 피점령된 곳이 많은 중동부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주제어: 한국전쟁,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전연지역, 접경지역, 개성, 삭녕, 고성, 농업협동화, 전후 복구, 민북마을

## I. 머리말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2018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와 이를 이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이루어졌다.<sup>1)</sup>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교류 협력 구상도 활발하게 제시되어 왔다. 대체로 농수산·산림 자원과 인문사회 자원 등을 활용한 남북 접경지역 간 교류 협력 및 관광특구, 경제특구 등의 조성 방안에 대한 것이다.<sup>2)</sup> 남북 접경지역간 교류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국자 간의 정치군사적인 합의와 이행은 물론, 양 지역의 인프라와 인문사회적 맥락 등에 대한 다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 범위 및 연구대상 범위는 대체로 남쪽에 머물러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비무장지대 일원을 비무장지대와 그 남쪽 지역으로 정의하고, 주로 남방한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을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2018년 9월 19일).

2) 손기웅 외 지음,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3): 정책제안』(서울: 통일연구원, 2010); 손기웅, 최수영, 최경수 공저,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13); 이정훈 외, 『트윈시티모델에 기반한 남북한 접경지역 분석과 발전 전망』(경기: 경기연구원, 2019); 이정훈 외, 『한반도 신경계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경기: 경기연구원, 2019) 외 다수의 논저.

다루어 왔다.<sup>3)</sup> 남북 접경지역 또는 비무장지대 일원은 그야말로 남북한이 서로 맞닿은 지역으로서 연결성과 단절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그 절반인 남측 접경지역만 봐온 셈이다. 물론 북측 접경지역을 연구하지 못한 데는 연구대상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과 분석자료의 제한이라는 연구방법상의 중요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비무장지대 너머의 북한을 보려는 시각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연구대상을 북측 지역으로 확대하고, 북측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비무장지대 인근 전망대들을 방문할 때, 망원경을 통해 건너편으로 보이는 북한의 마을들이 남한에 보여주기 위한 선전마을이며, 사람이 가끔 오간다는 안내가 전부이다. 북한 접경지역의 변화를 보도하는 언론도 마을의 건물 정비를 단편적으로 다룰 뿐이다.<sup>4)</sup>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 그 마을들이 정말 선전마을인지 지역적 특성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나아가 ‘선전마을’이라고 규정해버림으로써,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상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고,

3) 휴전선과 DMZ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남방·북방한계선 사이의 지역이다. 민북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인 통제보호구역에 대해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민간인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민통선’) 이북지역이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는 시군을 의미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전협정 및 관련법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바람직하다. 다만, 이 글에서 남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를 사이로 남한과 북한이 접한 지역을 말하며, 이 중에서 북한지역을 ‘남북 접경 중 북한(북측) 지역’ 또는 ‘북한(북측) DMZ 접경지역’ 등으로 약한다.

4) 「북한은 지금 北 선전마을의 실체는?」 MBC 통일전망대, 2016. 6. 20.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4003646\\_29114.html](https://imnews.imbc.com/replay/unity/4003646_29114.html); 「변화하는 북한 선전마을」 『연합뉴스』 2020. 10. 30. <https://www.yna.co.kr/view/PYH20201030091100060>.

그 지역의 역사나 특성에 대한 파악이나 탐구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남북 접경 중 북측 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DMZ 일원에 관한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북측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그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북측 접경지역의 형성과 그 특징을 규명할 것이다. 대상 시기는 한국전쟁 정전을 전후로 한 1950년대인데, 분단 이전 동일한 역사문화와 비슷한 경관을 이루었던 공간이 단절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어 서로 다른 특성과 경관을 가진 지역으로 변하기 시작한 시기가 한국전쟁 직후이기 때문이다.<sup>5)</sup> 정전과 군사분계선에 대한 북한의 평가, 접경지역 주민의 전시 경험 및 전후 복구와 농업협동화, 대표적인 마을 사례 등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이때 서부와 중동부 접경지역 간 차이를 드러내고,<sup>6)</sup> 남측 접경지역 상황과의 비교에도 유념하려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의 형성을 공간적·역사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북한 신문과 미군노획 북한문서,<sup>7)</sup> 농업 협동화 총결 자료, 정전협정 첨부 지도 등이다. 북측 접경지역에 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교차 분

5) 정전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북한의 평가 및 정책은 시기나 정세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고, 마땅히 한국전쟁 이후 시점부터 최근까지 그 변화를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이를 규명할 계획이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정전과 DMZ 접경지역에 대한 북한의 평가 및 정책의 출발이 되는 시기인 1950년대를 다룬다.

6) 남북 접경 중 북한지역은 한국전쟁 전후로 한 시기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로 북한에 편입된 개성 같은 '신해방지구'나 남한에 피점령된 지역이 많은 강원도 일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북측 접경지역의 형성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7) 정확한 명칭은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문서이다. 이 글에서는 미군노획 북한문서, 북한노획문서 등으로 약한다.

석하여 1950년대 북한 접경지역의 형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주로 활용한 자료는 『로동신문』이다. 『로동신문』을 통해 한국전쟁 정전 전후의 전선 및 비무장지대 상황과 그에 대한 북한의 정책 방향이나 인식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로동신문』은 중앙의 노동당 기관지답게 서부에서 중동부 지역 전반을 보도하고 있어 접경지역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다. 둘째, 접경지역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로동신문』이 보도하지 않는 지방사회의 세밀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신문인 『황해일보』와 『개성신문』을 활용할 것이다.<sup>8)</sup> 특히 『개성신문』은 한국전쟁 중에 북한이 38선 이남 서부 지역을 재점령한 후<sup>9)</sup> 이 일대를 ‘(신)해방지구’라고 명명하고 발행한 신문으로서, 웅진, 연백, 개성, 개풍, 판문 등에 이르는 접경지역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셋째, 『개성신문』 외에도 웅진과 연백 지역 관련 노획문서도 활용하여 가장 서쪽 접경지역의 전사~전후 변화를 파악할 것이다.<sup>10)</sup> 넷째, 『조선중

8) 『개성신문』(1952. 12. 19~1953. 6. 16), RG 242, North Korean Records, 1914-53, Captured Korean Documents, SA 2013, Entry NM 299, Box 1224; 『개성신문』(1953. 9. 18~1953. 12. 20), RG 242, North Korean Records, 1914-53, Captured Korean Documents, SA 2013, Entry NM 299, Box 1238; 『황해일보』(1953. 5. 21~1953. 11. 24), RG 242, North Korean Records, 1914-53, Captured Korean Documents, SA 2013, Entry NM 299, Box 1224. 강원도지방 신문으로는 1951년 7월 『강원로동신문』과 『강원인민보』가 통합된 『강북일보』가 발행되다가, 1953년 12월 『강원일보』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현재로서는 1952년 2~3월 5일분만 확인된다.

9) 한국전쟁 전에 남한에 속했던 이 지역은 개전 직후 북한에 점령되었으며, 1950년 가을 남한에 수복되었다가, 1951년 이후 북한에 재점령되었다.

10) 「황해도 내무부장 지령: 비적 수색사업 강화에 대하여」 RG 242, Box 114, Doc. 203615; 「조선로동당 황해도 웅진군 웅진면 은파분주소 분세포총회」(1952. 4. 19), 『북한관계사료집』 제1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남연백인위 제187호 전재민 및 령세농가 조사에 대하여」(1951. 6. 3), 『북한관계사료집』 제19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개성 개풍 등 해방지구에서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 강화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1951. 12. 24),

양년감』(1953년판)과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1958) 등을 활용하여 정전 전후 이 지역들의 변화를 파악할 것이다. 다섯째, 「정전협정 지도」<sup>11)</sup> 분석을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 접경 마을의 공간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정전 평가 및 접경지역 변화의 특징을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정전 전후 시기 남한 신문과 연구 문헌을 활용하여, 정전에 대한 남한의 평가 및 남측 접경지역 상황과 비교해 보려 한다.

## II. 북한의 정전(停戰) 평가와 접경지역 인식

### 1. ‘기다리던 정전과 ‘승리의 땅’

북측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정전과 남북 경계선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에 의해 형성되었다. 북한은 정전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고대하고, 정전협정 조인과 발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기다리던’ 정전의 달성과 확정된 군사분계선(MDL)을 북한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강조했다.

북한의 정전에 대한 평가와 정전 분위기는 『로동신문』에서 잘 드러난다. 7월 27일 『로동신문』은 정전협정의 ‘조인을 기다리는’ 판문점의 모습

---

『북한관계사료집』 제29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웅진 및 남연백군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결정서」(1951.12.24), 『북한관계사료집』 제29권.

<sup>11)</sup> Record Group 218, Korean Armistice Agreement, 1953-1953, Armistice Agreement Volume 2, Maps, NARA. 이하 「정전협정 지도」로 약함.

을 전했고,<sup>12)</sup> 다음날 『로동신문』은 호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결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김일성은 정전을 알리는 첫 방송 연설에서 기뻐하고 갈망하던 정전의 달성이라고 강조했고,<sup>13)</sup> 이후 『로동신문』의 기조도 이와 같았다.

인류 력사에는 획기적인 날들이 많다. 그러나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1953년 7월 27일 10시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시각이다. (중략) 오전 10시는 조선 정전 협정에 조인하는 시각이요, 오후 10시는 발효하는 시각이다. 이 시각이 어서 오게 하기 위하여 …… 노력하였고 3년 동안이나 전선에서 싸웠다. 마침내 이 시각은 오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 시각이 저절로 온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노력과 투쟁, 피와 목숨으로 쟁취하였다. 우리는 이 시각을 몹시도 기다렸다. 마치 멀리 갔던 귀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마치 자식 없는 집에서 □아이 낳기를 기다리듯, 우리는 몹시도 기다렸다. 특히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분초를 다뤄가며 기다렸다. …… 총성이 멎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터지듯 사람들은 막 거리로 밀려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 웃으며 □□ 정전을 축하 환영하였다.<sup>14)</sup> (강조는 필자. □은 해독 불가)

위의 기사는 귀중한 사람이나 자녀의 탄생을 기다리는 듯 분초를 다뤄가며 정전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정전협정 조인과 발효의 순간을 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당시 북한 신문 기사들에 의하면, 정전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조선 인민’과 나아가 ‘전 세계 인민’이었다.<sup>15)</sup> 즉, 정전은 평

12) 「정전 조인을 기다리고 있는 판문점」 『로동신문』 1953년 7월 27일.

13) 「정전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14) 정동혁, 「정전과 평화」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15) 북한의 신문들은 이미 정전협정 체결 이전부터 정전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의 실현이며 세계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황해일보』는 영국의 여성단체 ‘전국여성회의’가 조선전쟁의 종식에 대한 영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

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갈망하던 것이었으며, 달성해야 하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보도되었다.

정전은 북한에게 그야말로 절실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전면전을 개시했으나, 이후 전선이 남북을 크게 오르내리며 점령과 탈환을 반복한 후 남은 것은 수많은 인적, 물적, 심적 피해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대로 정전을 ‘역사적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평가했다.<sup>16)</sup>

그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세계 최강 미국에 대한 조선 인민의 승리’였다. 북한은 미국이 정전협정에 조인한 것이 곧 미국의 ‘세계 최강 신화가 산산이 깨어진 것’이라고 직결시켰다.<sup>17)</sup> 또한, 북한은 3년간의 전시 경험도 승리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전쟁을 치르면서 겪은 어려움보다는 3년간 북한 내부적으로, 군대,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등 모두가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사,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단련된 민족 간부’ 육성, 인민군 강화, 승리에 대한 신심과 민족적 자부심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높이 평가하고, 이를 ‘조선 인민의 승리’라고 주장했다.<sup>18)</sup>

북한은 평화 관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적인 차원과 한반도 차

한 스리랑카 평화옹호 위원회 위원장이 영국을 방문 중이던 스리랑카 수상에게 조선전쟁의 종식과 5대 강국 대표자 회의 소집, 조선으로부터의 외국 군대 철수 등을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며: 영국의 여성단체 ‘전국여성회의’ 조선전쟁의 종식을 건결히 요구」 『황해일보』 1953년 6월 7일; 「조선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며: 세일러 평화옹호 위원회 조선전쟁의 종식을 요구할 것을 수상에게 호소」 『황해일보』 1953년 6월 7일.

16)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근로자』 1953년 제9호.

17) 「조선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 『근로자』 1953년 제8호, 65쪽.

18) 「정전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원의 평화 달성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여 승리한 세계 평화의 명절'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전에 대한 각국의 환영 메시지를 소개했다.<sup>19)</sup>

반면, 한반도 차원에서는 정전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고 정전의 의미를 제한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의 '첫걸음'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이를 북한의 전후 복구와 연결시켰다.<sup>20)</sup> 북한은 이미 1951년 11월 19일 유엔에 대한 호소문에서 정전을 평화적 해결의 첫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북한은 이때 전투행위 즉각 중지와 DMZ 설치 등을 주장했었다.<sup>21)</sup> 북한은 이 연장선에서 남측에 대해서는 정전 반대나 지연이 한반도의 평화 지연이며, 그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이승만에게 있다고 비판했고,<sup>22)</sup> 다음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전의 공고화와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다시 곧 일어날 것이므로 평화를 건설할 수 없다고 인식해서는 안 되며, 현재 완전한 평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이하거나 자만자족하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3)</sup>

군사분계선과 피점령 지역에 대한 북한의 평가도 주목되는데, 이는 북한의 접경지역 인식 및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 
- 19) 「정전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조선 정전의 실현을 각국에서 환영: 조선 정전은 세계 평화의 명절」 『로동신문』 1953년 8월 1일; 『개성신문』 1953년 12월 4일.
- 20)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근로자』 1953년 제9호.
-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 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에서 전투행동의 즉각 중단에 관한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호소문 텍스트」(1951. 11. 2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22) 「김일성원수와 팽덕회 장군이 부대에 발표한 정전 명령」 『로동신문』 호외 1953년 7월 27일; 『개성신문』 1953년 11월 29일.
- 23)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근로자』 1953년 제9호.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분명히 군사분계선이 38선이 아닌 양측의 접촉선(전선)을 기준으로 획정되었음에도, 북한은 분계선이 38선 근처에서 그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38선이 가지는 정치군사적 명분 때문이었다. 정전회담 초기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북측은 군사분계선을 38선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유엔군 측은 그와 반대로 접촉선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했었다. 유엔군 측은 38선보다 더 북쪽에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는 것이 남침한 북한의 패배를 증명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38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24)</sup>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38선 기준의 군사분계선은 곧 미국의 패배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결국, 북측이 접촉선 기준의 군사분계선을 수용함으로써, 북측은 군사분계선 획정에서 정치군사적 명분을 잃었다. 하지만, 북한의 당기관지와 신문들은 ‘38선 근처’를 부각하면서, ‘판문점에서의 정전 조인’, ‘미국이 38선에 주저앉아 조인’한 것,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북반부를 지켜낸 것’, ‘남한이나 미국이 도발의 지점에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5)</sup>

둘째, 북한에게는 38선 이남의 개성 일대를 점령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당시 개성 일대의 확보는 정치, 군사,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정전회담 당시 유엔군 측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이전하고, 군사점령 또는 협상을 통해 개성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북측은 개성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수용하지 않았다.<sup>26)</sup> 북측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38선 대신 접촉선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미 점령하고 있던 개성지역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sup>27)</sup> 이에 대해 미군이 “개성이 38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

24) 제임스 메트레이, 「한국전쟁 휴전협상: 원심작용적 협상 전략?」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09쪽.

25) 「조선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 『근로자』 1953년 8월호, 65쪽; 「북경 역투에서 하신 김일성 원수의 연설」 『개성신문』 1953년 11월 15일.

26) 김보영, 『전쟁과 휴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124~129쪽.

27) 미육군성 군사감실 편찬, 육군본부 역, 『유엔군전사 제2집: 휴전천막과 싸우는

으며 한국정부가 그 반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점유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하나의 상징으로서는 그 가치가 동부나 중부의 많은 영토보다도 더 있었다”고 평가했듯이,<sup>28)</sup> 북한의 개성 일대 확보는 그만큼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마지막은 피점령 지역이 많은 강원도 일대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은 이 일대에 대해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했다는 점과 더구나 그 요충지가 ‘적의 중요 진지’라는 점을 강조했다.<sup>29)</sup> 그런데, ‘적의 중요 진지’라 묘사된 중동부 일대의 고지는 전쟁 이전에도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북한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고지의 남쪽은 남측에 피점령된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많은 지역을 잃은 것이었다. 그러나 『로동신문』은 이를 패배나 피점령 관점에서 서술하지 않았다. 즉, 개전 이전 통치 지역의 상실이 아닌, 전시 고지전에서 남측이 점령했던 지역을 북한이 탈환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강원도 일대의 고지 탈환에 대한 강조는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2년 뒤인 1955년 7월 27일자 『로동신문』은 ‘조선 인민은 승리의 영예를 간직하고 있다’라는 표제 아래 「영웅의 땅 고성지구에서」와 「승리의 노래」(시)를 게재했다. 고성 지역은 북이 가장 밀린 지역이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소제목과 함께 뺏고 뺏기기를 반복했던 이 일대의 고지를 북이 지켜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투사에 의하면, 이 일대는 원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있어 교통망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고성 북방

전선』, (육군본부, 1968), 20~32쪽, 34~37쪽, 85~91쪽.

28) 미육군성 군사감실 편찬, 위의 책, 86~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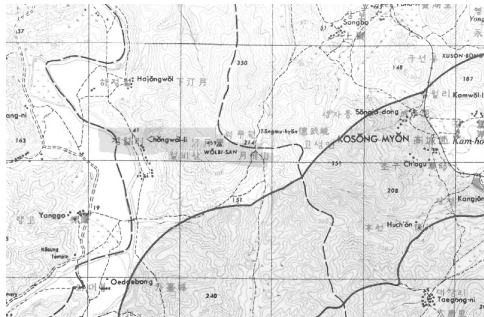
29) 「적의 중요 진지들을 탈환하고 1백 60여 평방키로를 해방」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그림 1〉 정월리 일대 전투 관련 『로동신문』 보도



출처: 『로동신문』 1955년 7월 27일.

〈그림 2〉 고성 월비산과 정월리



출처: 「정전협정 지도」에 월비산과 정월리를 표시함.

최고봉인 월비산은 동해안 고성-통천-원산 간 도로와 남강 일대를 감제하고 351고지는 동해안과 접한 저지대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였다. 때문에 1951년 7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월비산(459고지)과 351고지 등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한국군 제5, 11, 15사단, 수도사단과 북한군 제6군단 예하 제9사단, 제7군단 예하 제3, 7사단 등이 서로 뺏고 뺏기기를 반복했다. 미 제5공군과 한국 공군의 전투 지원까지

가세했는데, 정전 당일까지 한국 공군 15개 편대 60대가 월비산을 비롯한 351고지 인근 지역으로 출격하여 공격했다.<sup>30)</sup>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발효되고 전투가 멈추었을 때, 351고지와 월비산은 북한이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북방한계선보다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워낙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고, 후술하겠지만, 이 전투에는 정월리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정전 후에도 월비산 일대의 전투 승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정전을 주로 고대하던 정전의 달성과 승리, 평화, 영토 고수 및 탈환의 관점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이를 대대적으로 기뻐했고, 경축했다. 정전 직후 며칠 동안 북한 각지에서는 정전에 대한 경축 행사가 진행되었다. 『로동신문』은 기쁨과 환호로 정전의 분위기를 전했다. 평양, 사리원, 함흥, 원산, 개성 등의 주요 도시에서 이를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연일 계속되었다.<sup>31)</sup> 특히, 개성지구의 경우에는 북한 편입에 대한 ‘기쁨’, ‘감사’, ‘행복’ 등의 감정적 의미들이 추가되었다.

우리는 기쁘다. 승리를 하였기에 기쁘다. (중략) 우리의 기쁨은 엄숙한 기쁨이다.<sup>32)</sup>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6·25전쟁 주요 전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4~47쪽, 84~88쪽, 120~123쪽, 354~356쪽.

31) 「정전을 환호로 맞는 군중들」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인민들은 승리를 경축한다」 『로동신문』 1953년 7월 29일; 「승리의 함성」 『로동신문』 1953년 7월 29일; 「2만여 군중의 장엄한 시위」 『로동신문』 1953년 7월 29일; 「감격과 환희의 밤」 『로동신문』 1953년 7월 29일; 「높이 올리는 승리자들의 외침: 화선에서의 승리의 개가」 『로동신문』 1953년 7월 30일; 「높이 올리는 승리자들의 외침: 승리자들의 환호」 『로동신문』 1953년 7월 30일; 「위대한 승리를 경축한다」 『로동신문』 1953년 8월 2일.

32) 정동혁, 「정전과 평화」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개성지구 인민들은 누구보다도 정전의 실현을 기뻐하고 있다. (중략) 해방된 개성지구 인민들에게 있어 정전은 해방되어 공화국의 품안으로 확실하게 도라왔다는 행복을 다모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는 것이다. 개성시민들은 기쁨과 감격에 빛나는 표정으로 조선중앙방송을 통하여 시시각각으로 전해 오는 정전의 소식을 듣고 있다. (하략)<sup>33)</sup> (강조는 필자. □은 해독 불가)

이러한 정전에 대한 북한의 평가 및 태도는 남한의 분위기와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승만의 휴전 반대와 북진통일 주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다.<sup>34)</sup> 그런데 이를 북한과 비교하면 남북한이 정전을 얼마나 다르게 평가했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북한 신문을 통해 정전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던 북한과 대조적으로 남한은 정전 반대와 전투 계속을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정전을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으로 주장한 반면 남한은 전투를 통한 남북통일의 달성을 중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승리의 전쟁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당시 남한은 ‘사형선고’이자 ‘굴욕’이라고 인식하고, 평가했다. 더구나 남한이 정전을 거부하고 ‘휴전보다 죽음’ ‘실망’ ‘분노 폭발의 최절정’과 같은 감정들을 동원했던 것과 반대로<sup>35)</sup> 북한은 정전을 기쁨, 환호, 감사, 행복과 같은 감정을 동원하여 경축했다. 이렇듯, 당시 비무장지대를 사이로 정전을 맞은 남북한의 분위기는 매우 상반되었고, 이러한 정전에 대한 평가 차이는 남북한의 초기 접경지역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이 전후 접경지역 복구를 매우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남한에서는 접경지역을 군사적 적대행위나 전쟁의 폐허가 될 수 있는 곳

33) 「조중용사들에게 감사」 『로동신문』 1953년 7월 30일.

34)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84 (1994); 홍용표, 「전쟁 전개과정에서의 한미간의 갈등: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연구회,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35) 「국민의 실망은 최절정」 『동아일보』 1953년 6월 9일.

으로 보면서 이곳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시설 복구를 주저하기도 했다.<sup>36)</sup> 이는 남북 접경지역의 형성 과정의 차이로 이어졌다.

## 2. 정전 명령과 정전의 공고화

‘기다리던 정전’이라고 표현되었듯이, 전시 피해가 극심했던 북한에게 정전은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비록 정전이 완전한 평화 실현이 아니라,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단계에 불과했다더라도 전쟁을 멈추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전협정의 발효와 이행은 중요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 발표된 김일성과 팽덕회의 정전 명령은 북측이 정전의 실질적 작동 및 정전협정 이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전협정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조선 정전이 실현되며 파괴되지 않도록 견결히 보장하고 아울러 정치 회의의 소집에 유리하게 하며 한걸음 나아가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표한다.

1.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육군 공군 해군 해안 방어 부대 전체 인원들은 응당 견결히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즉 정전협정 조인 후 12시간으로부터 전 전선에는 완전히 정확할 것이며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72시간 내에 즉 정전협정이 효과를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전 전선에는 일률적으로 쌍방이 이미 공포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후퇴 하며 아울러 일률적으로 다시 비무장지대에 한걸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의 육군 공군 해군 해안 방어 부대 전체 인원들은 응당 고도의 경각심으로써 진지를 고수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침습과 파괴 행동을 방지할 것이다.

3. 정전협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군의 통제구역에 들어오는 군사정전위

36) 「제19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속기록 제16호: 단기428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1954. 10. 16), 15~16쪽.

원회와 연합 관찰 소조 소속 인원 중립국위원회와 그 소속 인원 연합 적십자사와 그 소속 인원 연합 적십자사 소조 소속 인원에 대하여는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체 인원은 모두 응당 환영을 표시할 것이며 책임지고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또한 그들의 사업상 적극적인 협조를 줄 것이다.<sup>37)</sup>

먼저, 서두에서 정전 명령의 목적을 명시했는데, 바로 여기서 ‘정전협정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라고 시점을 명시했다. 즉, 정전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정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전 명령의 첫 목적이었다. 전시 피해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일단 전쟁을 일단락 짓고 교전이 재개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 회의 소집에 유리하게 한다는 것도 주된 목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정치 회의란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따라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토의하기 위해 예정된 제네바 정치회담을 말한다. 이때 북측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비무장지대 설정 및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전 군에게 정전협정 발효 후 72시간 내 남북 양측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즉, 남북 한계선까지 후퇴하고, ‘다시 비무장지대에 한걸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전협정 제1조와 제2조의 주요 사항으로, 북측이 비무장지대 관련 규정 준수가 정전의 실현과 직결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침입 방지를 위한 전 군의 긴장을 명시했다.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주한미군의 주둔, 정전협정 반대와 북진을 주장하는 이승만 정권, 한일 회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예정 등이 진행되던 상황을 북한이 예의주시했던 데서 나온 것으로

37) 「김일성 원수와 팽덕회 장군이 부대에 발표한 정전 명령 (1953. 7. 27)」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보인다.<sup>38)</sup>

넷째, 정전협정 집행 기구와 그 인원들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후 북한 신문은 군사정전위원회 개최, 비무장지대에서의 철수에 대한 상호 통지, 추가 합의사항,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 이에 대한 북측의 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정전 직후 며칠간은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 관련 기사들이 비교적 건조하게 보도되었다. 물론 북한과 중국이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보도도 계속되었는데, 정전협정의 조항 중 하나인 실향사민 및 외국적 사민의 귀향(제59항), 중립국 시찰소조 사업 협조, 무기 운환 관련 규정(제13항) 등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그 예이다.<sup>39)</sup> 유엔군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는 기사에서도 이를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이 위반 문제를 환기했고, 이를 유엔군이 인정했다는 정도로 보도되는 경향이 많았다.<sup>40)</sup> 이는 북측이 유엔군 측의 협정 준수 및 위반을 주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점차 유엔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 관련 보도들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아졌다. 1953년 8월 중순부터, 포로 송환 문제와 유엔군의 장개석 지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로

38) 「정전협정 체결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39) 「조 중측의 배려 밑에 청진 출입항의 중립국 시찰소조 사업 원만히 수행」 『로동신문』 1953년 9월 26일; 『개성신문』 1953년 11월 18일; 『개성신문』 1953년 12월 15일; 「실향 사민 및 외국적 사민이 상대방 지역으로 가는 것을 협조하는 사업 개시」 『로동신문』 1954년 3월 4일.

40) 「군사 정전 위원회 8월 5일 회의」 『로동신문』 1953년 8월 7일; 「조선 군사 정전 위원회 8월 8일 회의」 『로동신문』 1953년 8월 10일; 「군사 정전 위원회 쌍방 비서장 회의 8월 15일에 진행」 『로동신문』 1953년 8월 18일.

동신문』은 관련 사건들을 미군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항의문도 게재되었으며, “미국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 “새로운 침략 기도”라고 비판했다.<sup>41)</sup> 1953년 말이 되면, 미군 비행기의 월경과 그것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더욱 증가하는데, 미 군용기 대수, 일시, 상세 경위도, 비행 방향 등을 포함한 위반 사건들이 보도되었다.<sup>42)</sup> 1954년에는 북한이 교류 및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비무장지대 통과를 제안했다는 기사가 일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북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미군의 침입과 공격, 포탄 발사 등에 대한 보도였다. 1955년에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등장했다.<sup>43)</sup>

북한은 정전협정 준수와 정전의 공고화를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정전협정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이며, 평화적 해결의 전제이고,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이 지지하는 협정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sup>44)</sup> 정전협정 준수 및 정전의 공고화란 무엇보다 적대행위의 재발 방

41) 「「한미 호상 방위 조약 체결」을 반대 배격하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중앙위원회 항의문」 『로동신문』 1953년 8월 14일; 「미국인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앞길을 가로막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로동신문』 1953년 8월 14일; 「한미 호상 방위 조약 체결은 미제의 새로운 침략 기도이다」 『로동신문』 1953년 8월 16일.

42) 「적측 군용비행기 또 다시 정전 협정 위반」 『로동신문』 1953년 11월 10일; 「적측은 계속 부단히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로동신문』 1953년 12월 4일.

43) 「정전 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측이다」 『로동신문』 1955. 7. 2; 「정전 협정에 대한 판이한 두 로선」 『로동신문』 1955년 7월 26일; 「미제 침략자들 조선 정전 협정의 파괴를 음모」 『로동신문』 1955년 8월 21일; 「누가 조선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가」 『로동신문』 1955년 11월 21일.

44) 「세계 여론은 조선에서의 정전의 공고화와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로동신문』 1955년 7월 27일; 「조선 정전협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55년 9월 1일.

지를 의미했으므로, 북한은 이를 통해 전후 복구 사업을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정리하면, 북한은 ‘고대하던 정전의 달성’을 ‘승리’와 ‘평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축했다. 전쟁의 결과 점령한 서부 지역을 ‘신해방지구’라고 명명한 것은 물론 상실된 -남한에 피점령된- 지역이 많았던 강원도 일대에 대해서도 ‘주요 고지의 탈환 및 사수’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전협정 체결도 이 연장선에서 평가되었지만, 사실상 정전협정의 준수란 교전의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것이었고, 전시 피해 극복 및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전의 공고화는 북한에게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54년 정치회담 결렬 등의 정세 변화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미 군용기의 월경 사건들이 겹치면서, 북한은 미군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준수와 정전의 공고화를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전후 복구를 강력히 추진해갔다. 그리고 빠른 전후 복구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북한의 정책적 지원과 접경지역 주민의 전시 원호 경험 등이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 Ⅲ. 북한의 접경지역 정책과 전후 복구

#### 1. 전시 ‘전선지구’(戰線地區) 정책과 지역 주민의 전선 원호

비무장지대 인근은 1951년 중반 이후 전선이 교착되었던 곳이다. 1951년 7월부터 정전회담이 열렸으나, 북측과 유엔군 측은 남북경계선의 설정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양측의 전투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기로 함

의했고, 그 접촉선은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여 형성된 선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정전회담과 동시에 전투가 계속되면서 고지전이 벌어졌던 전선 일대를 북한은 화선(火線) 또는 전선(戰線) 지구 등으로 불렀다.<sup>45)</sup> 그리고 이 일대에 대한 통치체계를 정비하고 주민들을 전선 원호 사업에 동원했다.

먼저, 북한은 38선 이남 서부 지역을 재점령함과 동시에 당·정·사회 단체에 대한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 이 서부 지역은 한국전쟁 전에는 남한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개전 초기 북한의 점령하에 놓였다가 1950년 가을 남한에 수복되었는데, 1951년 봄 이후 북한에 재점령되었다. 1951년 1월 북한은 옹진과 남연백 지역을 재점령한 후 인민위원회와 당세포를 조직했다.<sup>46)</sup>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개성에서 진행되고 완충지대로 선포되자, 북한은 1951년 9월 개성시 임시인민위원회(개성시 인민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조직했고, 노동당 개성시당·민주청년동맹·여성동맹 등도 복구했다. 노동당 제4차 전원회의(1951.11)의 노동당원 증가 방침 결정에 따라, 개성과 개풍 주민들의 노동당 입당도 증가했다.<sup>47)</sup> 1951년 12월 24일에는 당중앙위원회(제108차) 결정에 따라, 개성·개풍지역이 중앙에 직속되고 옹진·남연백이 황해도 소속 군이 되었으며, 농촌·직장에 당세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sup>48)</sup> 1952년 4월에는 각 직장단체에 세포가 조직되었다.<sup>49)</sup>

45)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553쪽.

46) 「남연백인위 제187호 전제민 및 령세농가 조사에 대하여」(1951. 6. 3), 『북한관계사료집』 제19권, 420~431쪽.

47) 「동기간에 있어서의 당사상정치교양사업」 『개성신문』 1952년 12월 19일.

48) 「옹진 및 남연백군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결정서」(1951. 12. 24), 『북한관계사료집』 제29권, 160~161쪽; 「개성 개풍 등 해방지구에서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 강화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1951. 12. 24), 『북한관계사료집』 제29권, 158, 160쪽.

1952년 12월에는 서부 점령 지역에 대한 행정체계도 개편되었다.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1952.12.22)에 따른 북한 전역의 지방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이 진행되었는데,<sup>50)</sup> 점령 지역에도 적용된 것이었다. ‘개성 지구’라는 도(道)급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2개 군을 두었으며, 종래의 81개 리를 33개 리로 통합하고, 2개 읍을 신설했다.<sup>51)</sup> 이때 개풍군의 동부지역(봉동면, 상도면, 중면, 흥교면, 임한면, 청교면의 2개 리)과 장단군 진서면 5개 리(용흥리 제외)를 통합하여 판문군을 신설했으며, 연천군 서남면과 삭녕면을 철원군에 편입했다. 많은 지역이 남한에 피점령된 강원도는 종래의 10개군으로부터 15개군으로 세분되었으며, 종래의 1,135개 리가 397개 리로 통합되었고, 15개 읍과 3개 로동자구가 신설되었다.<sup>52)</sup>

1952년 12월 행정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간부급 인사들도 재배치되었다. 개성·개풍에는 당중앙·내각·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특파원들이 파견되었고, 옹진·남연백에는 중앙에서 황해도에 파견된 간부들 중 당사업경험자가 선발 배치되었으며, 황해도당 부위원장과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장기 출장을 반복했다.<sup>53)</sup> 이와 같은 간부급 인사들의 재배치는

49) 「조선로동당 황해도 옹진군 옹진면 은파분주소 분세포총회」(1952. 4. 19), 『북한관계사료집』 제15권, 756~759쪽.

50)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 지역의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 『로동신문』 1952. 12. 2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1961)』, 선인, 479~482쪽; 한길언, 『조선전사』 제27권, 100~101쪽; 「지방행정구역개편 통계표」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517쪽; 한국모, 「리인민위원회의 사업강화를 위하여」 『인민』 1953. 3, 47~48쪽; 김일성, 「지방행정체계와 행정구역을 개편할 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 제2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2. 11. 27), 『김일성저작집』 제7권, 379~381쪽.

51)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517쪽.

52) 위와 같음.

53) 한모니까, 2015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246~247쪽.

서부 접경지역(‘신해방지구’)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다른 북한지역의 경우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50년 가을 피점령과 ‘반혁명’ 상황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피점령 상태에서부터 북조선 지역을 탈환하여 지방당과 인민위원회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54)</sup> 신해방지구는 과거 남한 통치 지역이었다는 면에서, 다른 북한 지역은 피점령과 ‘반혁명’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체계 개편과 간부 재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북한은 전선 심각한 폭격과 전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전선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영농과 교육 등을 지속했다. 『로동신문』과 『개성신문』은 화선지대 농민들의 ‘열성적인’ ‘증산 궤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전쟁의 와중에 북한에 점령된 38선 이남의 남연백군이나 개풍군, 개성 일대의 청년들과 농민들은 식량 증산을 위해 분투해야 했다.<sup>55)</sup> 식량 증산, 고공품 생산, 현물세 납부, 추수, 자급 비료 생산에 ‘열성’을 다해야 했다.<sup>56)</sup> 1952년 12월 창도군으로 편입된 금화군 창도면 기성2리 주민들은 자급 비료 생산을 위해 분토를 생산하고, 자급 비료 시비 계획을 세웠다. 창도면 농민들은 1953년도 시비량의 70%를 확보했고,<sup>57)</sup> ‘화선에 인접한 금화군’ 농민들은 지난(1952년) 11월 말까지 현물세 전량을 완납했다.<sup>58)</sup>

그러나 전투 지역과 바로 인접한 이곳에서의 영농은 『로동신문』이 기

5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1961)』, 선인, 479~482쪽.

55) 「해방 지구 농촌 청년들 식량 증산에 궤기」 『로동신문』 1952년 3월 27일; 「다수확 위한 농민들의 힘찬 투쟁—당과 정부의 시책에 감사하며 식량증산 투쟁을 치렬히 전개」 『로동신문』 1952년 5월 25일.

56) 「강원도내 농민들 고공품 생산에 열성」 『로동신문』 1952년 12월 7일.

57) 「분토 생산에 열성」 『로동신문』 1952년 9월 21일; 「동기 자급 비료 생산 위한 전선 지구 인민들의 투쟁」 『로동신문』 1952년 12월 23일.

58)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현물세 납부 속속 완료」 『로동신문』 1952년 12월 8일.

사 코너 제목으로 뽑았듯이,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속에서 이루어진 ‘긴장된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sup>59)</sup> 강원도 전선 인접 지대 농민들은 “가열한 포연탄우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농토를 끝까지 지키어 5천여 정보의 파종 사업을 영웅적으로 완수”했다.<sup>60)</sup> 38선 이남 ‘신해방 지구’인 판문군 립한리 관산마을 주민들은 “산을 뚫고 방공호를 지어 땅굴 생활을 하면서 밤이면 전답을 갈며 거름도 내고 씨앗을 뿌리며 모도 옮겼”고, 심지어 임진강 건너 남측의 포대가 바로 보이는 강 옆에까지 콩배추를 심었다.<sup>61)</sup> 남연백 농민들은 남측의 계속되는 폭격을 무릅쓰고 반공유격대를 막아내면서 1953년도 모내기에서 전년도 실적에 비해 120.4%로 모내기 면적을 확장했다.<sup>62)</sup> 개풍군에서는 영농에 관한 리 단위별 경쟁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청교면 덕암리와 묵송리가 제1회 ‘승리의 기’를, 봉동면 발송리가 제2회 ‘승리의 기’를 수상했다.<sup>63)</sup>

『로동신문』은 주로 개풍군의 ‘열성’적인 모습들을 기사화했지만, 상대적으로 『개성신문』에서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 여러 상반되는 모습들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개풍군 묵산리 인민위원회에서는 “중심이 없고 산만한 보고가 ‘랑독’되는 동안 회의 참가자들은 보고와 회의에 대한 열의와 흥미를 잃고 잡담과 코고는 소리로 회의는 어수선”해졌다.<sup>64)</sup> 개풍

59)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자급 비료 생산에 총궐기」 『로동신문』 1952년 8월 21일; 「인민들의 긴장된 투쟁—강원도에서 추수 작업 활발」 『로동신문』 1952년 9월 17일;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현물세 납부 속속 완료」 『로동신문』 1952년 12월 8일.

60)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553쪽.

61) 「관산마을 사람들」 『개성신문』 1953년 11월 13일.

62)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553쪽.

63) 「긴장된 투쟁의 성과」 『로동신문』 1952년 8월 12일; 「인민들의 긴장된 투쟁」 『로동신문』 1952년 8월 30일.

64) 「리 인민위원회 조직위원회 조직진행 행정에서의 결합」 『개성신문』 1953년 6월 16일.

군 광답리 등의 리인민위원회는 실천 가능한 역할 분담이 명시되지 않은 결정서들을 채택하여 비판받았다. 개성시 손하리를 비롯한 일부 리 인민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회의 회수만 채웠고, 판문군 덕수리 대룡리 등 일부 리 인민위원회에서는 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나 리 인민반장들에게 사전 통지 없이, 리 인민위원장이 단독으로 막연하고 현실과 유리된 보고가 진행되었고 상부 결정지시는 임의로 변경되었다.<sup>65)</sup> 노동당원들이 주축이 된 리당위원회의 사정도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풍군 연릉리의 경우, ‘과거 무장치안대에 참가했던’ 인물을 세포핵심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당원들의 적극성이 없어지고, 대중에 대한 노동당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sup>66)</sup>

이러한 상황에서 전선 원호 사업이 전개되었다. 전선 일대 주민들은 원호미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생산하고 제공했으며, 위문편지를 보내고 군복 등을 세탁했다. 북한의 신문들은 이를 단순한 물적 동원이 아닌 ‘지극한 정성’이 담긴 원호로 주장했다.<sup>67)</sup> 개풍군 립한면 채련리의 다수화 농민들이 벼 3~8가마니를 전선원호미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편지를 썼다(1952.12.16). 『로동신문』은 그들의 편지와 그에 대한 김일성의 답장(1952.12.21)을 보도했다.<sup>68)</sup>

여성들의 가장 일반적인 전선 원호는 군복을 세탁하거나, 각종 선물과 위문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김화군의 여성들은 공동생산한 누에고치를 이용해 명주를 생산하여 만든 손수건에 꽃수까지 놓아서 전선으로 보냈다. 1952년 8월에는 인민군 의복과 내의 800여 벌을 세탁했으며 각종

65) 위와 같음.

66)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세포핵심 열성자들과의 사업강화에 노력: 개풍군 연릉리 당 위원회에서」 『개성신문』 1953년 6월 14일.

67) 「각지의 인민들 지성으로 전선 원호」 『로동신문』 1952년 8월 17일.

68) 「김일성 장군에게」 『로동신문』 1952년 12월 24일; 「개풍군 립한면 채련리 리기찬 리기덕 리범석 장기태 신현주 동지에게」 『로동신문』 1952년 12월 24일.



선물 400여 점과 위문편지 300여 통을 보냈다.<sup>69)</sup>

전선 일대의 주민들은 전투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특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곳일수록 전투에 투입된 주민들도 많았다. 철의 삼각지대로 유명한 평강-철원-김화 일대의 전투는 그야말로 혈전이 벌어진 곳이다. 특히 저격능선 전투(금화공세, 한국과 미국 명칭) 또는 상감령 전투(북한과 중국 명칭)라 불리는 김화 북방에서 벌어진 전투는 현재까지도 ‘승리’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곳이다.<sup>70)</sup> 바로 이 전투에 이 일대의 수많은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주민들은 전선과 후방을 오가며 부상병을 운반하고 치료했다. 1952년 10월 상감령 전투에는 김화 주민들이 ‘전선 위문대’ ‘부상병 위문대’ ‘담가대’ ‘식사반’ 등으로 동원되었다. 담가대란 부상병을 담가에 실어 나르는 여성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상감령 전투에 동원된 여성들은 담가대로서 왕복 15.7km 거리의 험한 길을 하루에 2회씩 부상병을 운반하였다. 또 금성전투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의 무명고지 습격전에서 부상자 후송과 치료를 도왔다.<sup>71)</sup> 북한의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사상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정전 2주년을 기념해서 『로동신문』이 특집 기사를 냈던 고성 월비산 일대의 전투와 전선 원호도 이미 1952년 『로동신문』이나,<sup>72)</sup> 1953년판 『조선중앙연감』 등에서 확인될 정도로 치열했다. 고성 정월리 여성들은 월비산 전투 때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부상병 후송사업

69) 「전선 장병들을 성심껏 원호」 『로동신문』 1952년 9월 22일.

70) 최근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화웨이의 회장 런정페이는 상감령 전투를 소환했고, 중국 관영 CCTV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1956년작 ‘상감령’을 방영했다. ‘상감령 전투’에 대해서는 오규열, 「중공군의 상감령(上甘嶺) 전투에 대한 재평가」 『군사』 46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참조.

71)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556쪽; 「화선 지대의 녀성들」 『로동신문』 1952년 12월 20일.

72) 「월비산 전투를 도운 마을 녀성들의 투쟁」 『로동신문』 1952년 3월 27일; 「조국의 고지 월비산」 『로동신문』 1952년 8월 23일.

과 포탄을 포진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을 16일 동안 연 4,650명이나 동원되어 용감하게 보장”했다고 한다.<sup>73)</sup> 하루에 약 290명의 여성이 부상병을 후송하고 포탄을 운반했던 것이다.

이렇듯, 화선지대의 주민들은 영농과 전투 방위를 겸해야 했다. 황해도 내무부장은 서해와 조강(祖江, 한강·임진강하구)을 건너 침투하던 반공유격대 수색사업을 강화할 것에 대한 지령을 내렸다.<sup>74)</sup> 옹진·남연백에는 이주민 농장 건설을 통해 농경지 황폐화를 막는 한편으로, 서해 반공유격대에 대한 방위를 하도록 했다.<sup>75)</sup> 철원에는 ‘전선 공동 작업대’가 조직되었다. 당시 철원의 분계선 마을 중 절반 가량은 주민들이 후방으로 소개되었고, 일부 리에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삭녕리와 내문리 등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생활하면서도 유격대를 조직해서 정찰, 연락, 탱크 폭발 등의 임무를 맡곤 했다. 그러다 전선이 고착됨에 따라 유격대는 농사에 주력하면서 군수품 수송과 부상병 후송 사업을 맡았다.<sup>76)</sup> 이때의 전선 원호는 전후 접경지역에서 영농과 군사 방위를 겸한다거나 공동생산분배 방식의 영농 활동이 정착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전선 전선지구 주민들은 거의 2년간 각종 전선 원호 사업에 동원되었다. 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쓴 영농과 원호미 납부, 병사를 위한

73)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556쪽.

74) 「황해도 내무부장 지령: 비적 수색사업 강화에 대하여」 RG 242, Box 114, Doc. 203615.

75) 「옹진 및 남연백군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결정서」(1951. 12. 24), 『북한관계사료집』 제29권, 161~162쪽; 「조선로동당 황해도 옹진군 옹진면 은파분주소 분세포총회」(1952. 4. 19), 『북한관계사료집』 제15권, 756쪽.

76) 리홍승, 「농업 협동 조합내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 사업」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 6 (평양: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1958), 2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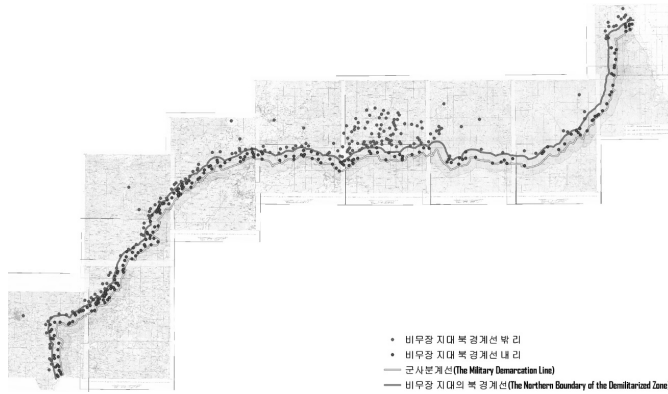
손수건 생산, 수백 벌의 군복 세탁 아니면, 전투 현장에서 준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어 병사들과 같이 전투하다시피 했다. 뿐만 아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전회담과 치열한 고지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동안, 마을과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거의 모든 주택과 시설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전투에 동원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병사와 가족, 이웃을 후송하는 등 전쟁을 몸소 겪었다. 전후 북한의 접경지역에는 바로 전시 병영과 영농을 겸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축이 되어 전후 복구와 농업협동화 등을 추진했다.

## 2. 전후 ‘비무장지대 분계선 인접 지역’ 복구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경계는 복잡하게 구성되었다. 먼저, 남북 경계선은 전쟁 이전의 38선에서 군사분계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씩 후퇴한 지점에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설정되었다. 남방·북방한계선 사이의 지역은 완충지대로서의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었다. 또한, 38선과 비무장지대 사이의 지역도 생겼다. 이로 인해 38선 이북-비무장지대 남쪽 지역, 즉 전쟁 이전 북한이 통치했던 경기도 북부 포천과 연천, 강원도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등의 많은 지역이 남측에 피점령되었다. 반대로 38선 이남-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즉 전쟁 이전 남한이 통치했던 웅진, 연백, 개성, 개풍, 장단 등은 북한에 점령되었다. 전자에 대해 북한의 신문들은 특별한 보도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은 북한에게 ‘상실지구’였다. 후자는 북한이 ‘(신)해방지구’라고 명명했다.

「정전협정 지도」를 통해 북한의 접경지역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정전협정 지도」에서 별도로 구분된 마을들을 표시한 것이다. 「정전협정 지도」에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 그려

〈그림 3〉 군사분계선~북방한계선 일대의 리(里)



출처: 「정전협정 지도」에 3개 국어로 표기된 마을들을 표시함.

져 있는 것은 익히 알려졌지만, 비무장지대 내부와 남방·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주요 면·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음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한글, 한자, 영어 3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글과 한자는 붉은색으로, 영어는 검은색으로 적혀 있다. 〈그림 3〉에서 보이듯이, 북방한계선 일대에 표시된 리가 비무장지대에 가장 인접한 북한의 마을이다.

정전 직후, 북한은 접경지역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 세금 감면 등의 정책과 전후 복구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접경지역 전채농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련된 내각 결정 제161호(1953.9.17)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전선 름접 지역에서는 직접 전투지역에 름접한 관계로 농작물의 피해가 다른 지방보다 더욱 혹심하며 일부 농민들은 금년도 수확으로서도 식량이 부족...

개성지구 판문점 후능리로부터 강원도 고성군에 이르기까지의 비무장지대 분계선에 름접한 전체 '리'들에 경작지를 가진 농민으로서 연간 총 수확량이 1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에 대하여는 1953년도의

만기 작물 현물세와 식량 및 종자 대여곡과 또 1953년도까지의 미납곡(현물세, 식량 및 종자대여곡) 전량을 면제한다.

분계선 린접 지대를 제외한 기타의 개성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많았으므로 개성지구 전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연간 총 수확량이 1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에게는 1953년도 식량 및 종자 대여곡과 1952년도까지의 미납곡(현물세, 식량 및 종자대여곡) 전량을 면제한다.<sup>77)</sup> (강조는 필자)

위 자료에 의하면, 내각은 세금 감면 조치를 하면서, “개성지구 판문점 후능리로부터 강원도 고성군에 이르기까지의 비무장지대에 린접한 전체 ‘리’들과 “분계선 린접 지대를 제외한 기타의 개성지구”라고 북측 접경지역 일원을 구분했다.<sup>78)</sup> 즉, 판문점 일대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와 이를 제외한 기타의 개성지구로 나눈 것이다. 전자는 대체로 육지의 비무장지대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 3>과 거의 일치하는 지역이다. 후자는 이를 제외한 서쪽 지역이며, 그 대부분이 신태방지구에 속한다.

북한은 접경지역에 세금 감면과 필수품 우선 공급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내각결정 제161호는 이 지역의 피해와 식량 부족을 심각하게 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로서, 분계선 인접 지역 전체 리의 빈농(1년 생계 유지 불가능)과 분계선 인접 지대를 제외한 기타 개성지구의 빈농(1년 생계 유지 불가능)에 대한 세금 면제를 결정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53년도 식량 및 종자 대여곡과 1952년도까지의 미납곡을 면제받았으며, 전자는 여기에 더해 1953년도의 만기 작물 현물세와 1953년도분 미납곡도 면제받았다.

77) 「비무장지대 분계선 린접지역의 전재농민들에게 1953년도 만기작물 현물세와 국가 대여곡 등을 감면할 데 관하여」 내각결정 제161호(1953. 9. 17).

78) 위의 글.

세금 감면 조치 외에 필수품 우선 공급 정책도 실시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다른 북한지역과 달리 오랫동안 전투구역으로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휴전회담이 열리던 서부와도 다르게 전투가 집중된 곳이었기에 미군의 폭격과 함포 사격 등이 더욱 심각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거의 모든 산업 시설들과 교육 문화 시설이 파괴되었고, 주택은 물론 축력과 농기구들도 파괴되었다.<sup>79)</sup> 고성군의 경우, 폭격으로 인해 장전조선소를 비롯한 각종 해양시설이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고성군 내 30여 개의 각급 학교와 극장, 농촌 구락부 등이 모두 파괴되었다. 금강군의 휴양소들과 장안사 등 명찰들과 문화유산도 소실되었다.<sup>80)</sup>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강원도에는 「강원도 인민들의 생활 안정 및 향상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 제191호」가 채택되었다. 일용 필수품 공급을 위한 1954년 강원도 지방산업 투자, 주택 건설을 위한 벽돌 및 기와 공장 건설, 천연 스투트 생산 지대 탐사를 통한 생산 시설 확장, 농경지 복구와 휴경지의 농민 분배, 관개 시설 복구 및 하천 준설 공사, 농기구 공급, 역우·역마 저렴한 공급 및 국가 육류의 의무 구매제 폐지, 어선 분양 및 어업 협동조합 조직, 원산-고성 간 및 원산-평강 간 철도 복구, 화물 자동차 증가, 일용 필수품과 과동용 물자 공급을 위한 소비조합 유통액의 증가, 병원과 보통학교의 신설 및 복구 등 확장 등을 내용으로 했다.<sup>81)</sup> 이외에도 강원도 인민위원회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대의 휴경지를 이용하여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기로 했다.<sup>82)</sup> 내각 결정 제191호에 따

79) 「강원도 인민들의 생활 안정 및 향상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신문』 1953년 11월 23일.

80)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한 강원도 농민들의 새 생활」 『로동신문』 1953년 12월 29일.

81) 「강원도 인민들의 생활 안정 및 향상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신문』 1953년 11월 23일.

82) 위와 같음.

라, 강원도의 시군별 지방산업 설비, 소비조합 중앙위원회의 생활필수품과 가축 공급에 대한 계획 등이 수립되었으며 농민은행 강원도 지점에서는 가급류 구입·어업·농촌 부업 자금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철원 등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 농민들도 자돈 178두를 구입했고,<sup>83)</sup> 토지 적은 재해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었으며, 땅이 척박한 지대의 영세농민들은 땅이 여유 있는 지대로 이주되었다.<sup>84)</sup>

개성지구에도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17만여 톤의 과동용 무연탄이 지급되었고(내각결정 제146호), 카바이트(등화용)·식염·신발 등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건축용 목재와 자금대부·제대군인에 대한 신발과 옷 공급·화학비료 추가 공급(내각 명령 제47호) 등이 실시되었다.

개성·개풍 지역에 대한 정책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역사를 고려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이다. 민간 인삼포 운영 및 개인 상공업 장려, 방직공업 육성, 전통문화유산 보수, 교육 기관 확장 등의 정책이 그 예이다. 이 정책들은 이곳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특히 민간 소유 보장은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과 소유권 박탈 우려나 불안을 덜 수 있는 정책이었고, 교육 기회 확대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였다. 민간 인삼포 운영을 비롯한 개인 상공업 장려는 숙련된 특정 기술이 필요한 인삼포 등을 북한 정부가 모두 관리 운영할 수 없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자, 이 일대에 상공업자나 기업가가 많은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전통문화유산 보수는 고려의 수도 고려라는 고도(古都)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조치였

83) 「강원도 인민들의 생활 안정 및 향상을 위한 내각 결정 집행에 노력하는 중앙 소비 조합」 『로동신문』 1953년 12월 14일.

84) 「인민들의 생활 개선에 대한 당과 정부의 심심한 배려」 『로동신문』 1953년 11월 24일.

다. 즉 기본적으로 이 일대의 고유한 산업구조 및 역사문화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들이 취해졌다.<sup>85)</sup>

또한, 기존의 기간 산업 시설들을 최대한 복구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용진·연백 일대에서는 철도와 관개 시설 복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1953년 11월 3일 개풍군 토성과 황해도 해주 사이에 부설된 철도인 토해선의 일부 구간에 대한 복구가 시작되었다. 1953년 11월 20일 총 48km에 달하는 해주—연안 간 철도가 개통되었다. 개통식에는 철도성 김동철 부상, 황해도당 허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철도성 간부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참석했고, 각 역에는 인공기와 “모든 것을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으로!”라고 쓴 플래카드가 펄럭였다.<sup>86)</sup> 북한 정부는 「해방지구 남연백의 관개 시설을 복구할 데 대한 내각지시 제 142호」를 발표했다. 이 남연백 관개 시설의 복구는 연안, 배천, 청단 3개 군에 걸친 넓은 벌판에 관개 용수를 급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불안전답을 수리완전답으로, 휴한지를 전답으로 복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연백 관개 관리소는 1953년 11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해방지구 주민들이 총동원되었다. 관개 시설 복구를 위한 도로 운수시설 복구 기초 공사도 수행되었다.<sup>87)</sup> 이러한 정책은 곡창지대인 서부 지역의 쌀 생산을 독려하고, 나아가 생산 곡물 수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농업생산량 증가를 위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개간까지 착수했고, 수백 정보의 논밭을 일궜다. 판문군 동창리에서는 곡물 생산량과 토

85) 한모니까, 「북한의 ‘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정책과 그 특징」 『역사문제연구』 36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16), 398~401쪽.

86) 「해방지구 인민들의 환호 속에 해주연안 간의 철도 개통」 『로동신문』 1953년 11월 24일.

87) 「내각 지시 142호에 의한 남연백 관개 시설 복구 공사 착수」 『로동신문』 1953년 12월 9일; 「창조적 로력 전선에서—남연백 지구 관개 시설 복구 공사 급속도로 진척」 『로동신문』 1953년 12월 16일.



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논밭개간사업을 추진했다. 동창리 주민들의 일부는 비무장지대 내에 속한 창내리 사람들이었다. 창내리가 비무장지대에 속하게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동창리로 이주했다. 동창리 협동조합은 전쟁 전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창내리 논밭을 개간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관리위원장, 노동당원, 농장원, 인민군이 동원되어, 논에 모를 내고 개간된 밭에 인삼포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지뢰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간첩’을 잡기도 했다.<sup>88)</sup> 즉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북측 지역을 과거의 고향이자 개간할 휴경지 등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북측 지역에 마을 조성과 주민 거주는 불가능했지만,<sup>89)</sup> 북방한계선 밖의 마을 사람들은 비무장지대 안팎을 오가며 토지를 경작했다. 농업생산량 증가를 위한 비무장지대 내 경작이었다.

정전 직후 북한은 접경지역 복구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세금 감면과 필수품 공급 등의 정책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비무장지대 내 외의 황무지 개간·국영농장 건설 등을 통해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기간 산업 시설의 빠른 복구를 통해 생산과 운송을 원활히 하고자 했다. 북한 접경지역의 전후 복구 과정은 북한사회 전반의 협동화, 즉 사회주의 전환의 일환이기도 했다. 접경지역의 전후 복구와 농업협동화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는 남한의 접경지역 복구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일단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민북지역)의 대부분이 군사지역에 해당하고 일부 지역에만 민간인의 정주(定住)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편성 시에도 군사적 적대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지원 및 복구의 필요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sup>90)</sup>

88) 이정근·리병렬, 『원한의 군사분계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12~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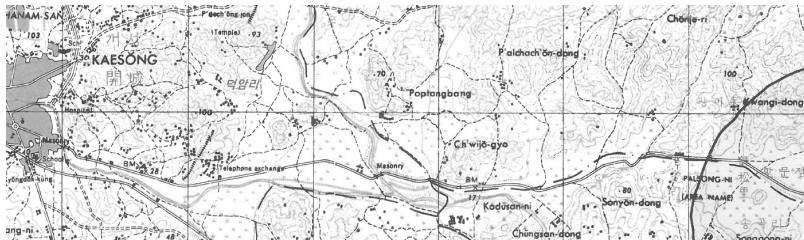
89) 이때 기정동은 제외이다. 정전협정과 군사정전위원회 후속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북한의 기정동과 남한의 대성동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90) 「제19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속기록 제16호: 단기4287년도 제1

### 3. 사례 - 개성 덕암리와 철원 식녕리의 전시 경험과 농업협동화

북측 접경지역의 전후 복구와 농업 협동화를 두 마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서부에 위치한 신해방지구와 중동부지역인 강원도 일대의 협동조합 건설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4〉 개성 덕암리와 그 일대



출처: 「정전협정 지도」에 덕암리를 표시함.

먼저, 신해방지구 개성의 경우이다. 1958년 모범 사례로 꼽힌 개성시 10월 농업협동조합의 협동화는 여러 단계와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다. 10월 농업협동조합은 덕암리 우물골에 있다. 덕암리는 〈그림 4〉에서 보이듯이, 개성 동쪽에 위치하며, 서북쪽으로는 송악산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판문점이 보이는 그야말로 남북 접경 마을이다.

일제식민지기 토지의 대부분은 동양척식회사와 부재지주의 소유였으며, 100여 호 중 80여 호가 소작을 했고, 20여 호는 인삼포에서 고용 노동을 했다. 해방 직후, 소작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0월 인민 항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점령되었고, 1952년 봄 재령 등지로 소개되었던 주민들 40여 호가 돌아왔고, 품앗이반 등을 조직하여 농사를

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1954. 10. 16), 15~16쪽.

지었다.<sup>91)</sup> 이때 영농 경쟁 운동에서 묵송리와 더불어 제1회 승리의 기를 수상하기도 했다.<sup>92)</sup>

1953년 7월 정전이 되자마자, 개성시당 위원회와 시 인민위원회는 덕암리에서 부업협동조합을 조직했는데, 개성 지구의 첫 조합이었다. 여기에는 6호의 빈농과 3호의 중농이 참여했다. 1953년 11월 빈농의 참여하에 25호로 제2 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sup>93)</sup> 1954년 초여름 관리위원장은 소련농업견학단으로 뽑혀 2~3개월간 소련의 사회주의 농업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후 협동조합은 꼴호즈를 모델로 삼았다. 조합은 50호로 증가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불안과 불신, 빈농의 참여에 대한 불만, 의령 김씨의 조합 반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55년 12월 협동조합은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해서만 분배를 실시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방식인 제3형태로 전환했다. 그리고 1956년 가을 개인 경리로 남아 있던 41호가 모두 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전시 품앗이반에서 시작하여 정전 직후 9호의 부업협동조합으로, 이후 제2형태 조합을 거쳐, 제3형태로 전환하고, 모든 농호가 가입하여 완료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sup>94)</sup>

철원 삭녕리의 백로산 농업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자. 삭녕리는 위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둔 '분계선 린접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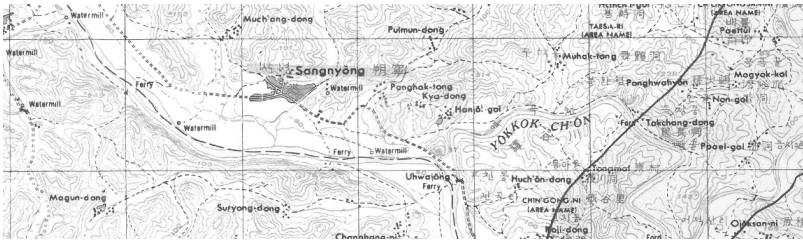
91) 리현우, 1958 「신해방 지구 농민들의 앞장에 서서—개성시 10월 농업 협동 조합—」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 1,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339~376쪽.

92) 「긴장된 투쟁의 성과」 『로동신문』 1952년 8월 12일.

93) 이때의 이름은 '정동농업협동조합'이었는데, 10월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이다(이준희, 「1950년대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업협동화: 10월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7,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17), 481-517쪽).

94) 리현우, 「신해방 지구 농민들의 앞장에 서서—개성시 10월 농업 협동 조합—」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 1 (평양: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1958), 339~376쪽.

〈그림 5〉 철원 삭녕리 일대



출처: 「정전협정 지도」에 삭녕리를 표시함.

백로산 농업협동조합은 전시 ‘전선 공동 작업대’가 그 전신이었다.

해방 이전, 연천군 삭녕면 소재지였던 삭녕리는 임진강 수로로 서울과 인천으로 통하는 나루터가 있었고, 많은 농산물이 집산했던 곳이다. 해방 당시 300여 호의 농민과 상인들이 있는 농촌 소도시였다. 한국전쟁 때 전선이 교착되던 1951년 여름, 연천군당은 이 마을에 유격대대를 두 개 조직했는데, 그중 하나가 백로산대대였다. 1952년 연천군당은 이 유격대를 전선 공동 작업대로 개편했다. 이들은 전시 식량 증산과 전선 원호 사업 보장을 목표로 했다. 연천군당의 교육에 따라 소련 꼴호즈에 대한 학습도 했고, 이를 모델로 삼았다. 토지통합과 역축농기구 등 생산수단의 공유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수입 분배, 규율 준수, 공동재산 애호 등을 규약으로 정했다. 1952년 봄 작업대는 방공호를 파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식량 생산과 전선 원호 사업을 진행했다. 담가대원들은 하룻밤에도 4~5차례씩 부상병을 운반했고, 수혈했다. 파괴된 도로와 교량을 복구하여 전선 수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수송로가 끊어지는 날이면 밤에 동원되어 수리했다. 전후, 삭녕 마을에는 집 한 채 남지 않았고, 후방으로 소개되었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왔다.<sup>95)</sup>

<sup>95)</sup> 리록영, 「전쟁의 불길 속에서 조직된 ‘전선 공동 작업대’의 토대 위에서—강원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 조직 방침에 따라, 1954년 3월 10일 ‘백로산’ 이름을 붙여 제3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했다. 이후 삭녕의 원주민은 물론 38선 이남에서 들어온 사람, 정전 후 양강도와 함경남도에서 온 60여 호의 이주민 등이 함께 생활했다. 1954년 총 농가 117호 중에 식량 여유 농호 11호, 자급자족 농호 23호, 부족 농호 83호에서, 1957년 총 농가 호수 344호 중에 식량 여유 농호 220호, 자급자족 농호 104호, 부족 농호 20호로 변화되었다. 1955년 20호의 개인 농민이 남아 있었으나, 1957년 모두 가입함으로써, 삭녕 마을의 협동화가 완성되었다.<sup>96)</sup>

개성 덕암리와 철원 삭녕리 모두 비무장지대에 인접했으며, 소련의 꿀호즈 집단농장을 모델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덕암리의 경우 여러 단계와 굴곡을 거쳐 제3형태로 전환된 반면, 삭녕리는 처음부터 제3형태로 조직되었다. 이는 그 이전의 역사적·사회경제적 경험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남한의 통치를 받았던 신해방지구로서의 개성과 전쟁 이전부터 북한의 통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전쟁 중에 ‘전선 공동 작업대’라는 전신이 있었던 철원의 차이를 반영했다. 이는 북한의 DMZ 접경 마을이 냉전이 본격화된 이후의 체제 대립의 상징의 하나인 대남 선전마을로 조성되었다기보다는 한국전쟁의 과정과 결과로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선·화선’일대의 주민들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어 자신의 고향을 ‘지켜낸’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신속한 전후 복구와 협동화(사회주의화)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마을 구성원의 변화와 조직·운영 방식이 달라졌다.

이 두 마을의 경우는 남한의 민북마을과도 비교할 수 있다. 무엇보다 DMZ 접경지역에의 주민 재정주 시점의 차이가 뚜렷하다. 북한의 DMZ

도 철원군 백로산 농업 협동 조합」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 1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1958), 43~74쪽.

<sup>96)</sup> 위와 같음.

접경 마을들은 정전 이전부터 타 지역으로 소개되지 않고 남은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영농과 전선 원호를 겸하고 있었다. 정전 직후 나머지 주민들이 마을로 복귀하고, 타 지역의 빈민이 이주해 와서 마을의 전후 복구에 참여했다. 그러나 남한의 DMZ 접경지역은 기본적으로 민간인통제선에 의해 원주민의 접근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북측 접경 마을보다 늦은 시기에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었다. 가장 빨랐던 시기가 1954년 봄으로, 38선 이북 수복지구에 원주민의 재정착이 가능해지면서였다. 그러나 이때도 남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에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 인근 최전방 지역에는 입주할 수 없었다. 둘째 시기는 그야말로 민간인통제선 이북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민북 마을 중에 가장 빨리 조성되어 ‘자립안정촌’의 시작이 된 양구군 해안면(당시 인제군)의 주민 입주는 1956년, 난민개척사업의 일환으로 50가구가 정착한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입주는 1958년이었고, 철원군 월하리 주민 72세대의 입주도 1959년이였다.<sup>97)</sup>

개성 덕암리와 철원 삭녕리의 협동농장 사례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조성된 남한의 전략촌과 유사한 면이 있다. 전략촌은 민북지역에 조성된 마을의 한 유형으로, 재건촌과 통일촌으로 나뉜다. 전략촌은 1960년대 중반 키부츠와 모샤브를 모델로 구상되었다. 키부츠는 집단정착, 토지국유, 국가노동, 상호협조, 공동판매와 구매, 공동 소득, 공동 소비의 공동체를 운영했다. 모샤브는 토지국유, 자가노동의 원칙, 공동판매와 구매를 중심으로 했다.<sup>98)</sup> 1968년 12개의 재건촌이 만들어졌고, 이를 보완하여 1973년 2개의 통일촌이 조성되었다. 전략촌별로 주민 구성이나 중심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원주민, 재향군인, 이

<sup>97)</sup> 민북마을의 조성 시기에 대한 정리는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춘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을 참조.

<sup>98)</sup> 고광도, 「귀농선 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국방대학원 졸업논문, 1967).

주민 등으로 구성되었고, 영농과 군사안보 기능을 겸했다.<sup>99)</sup> 이렇게 보면, 북한의 분계선 마을은 정전 직후에 재건되었고, 남한의 전략촌은 1960년대 후반 조성되었다는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생산수단의 소유와 공동생산 및 분배 등의 구상은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일촌의 경우 여기에 더해 북한에 남한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 요소들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sup>100)</sup> 1950년대 북한의 접경 마을의 경우에는 대남 심리전의 측면보다는 북한의 내적 필요성과 사회 변화, 즉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화가 주된 변화 요인이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1950년대 북한 접경지역의 형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주요 과정 및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DMZ 접경지역 중 북측 지역의 형성은 한국전쟁 정전 및 군사분계선에 대한 북한의 평가와 정책에서 연유했다. 북한은 정전을 ‘고대하고 달성하려는 목표’이자 ‘승리’, ‘평화’, ‘기쁨’, ‘행복’ 등으로 인식했다. 특히 군사분계선과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승리’라고 평가했다. 38선이 아닌 접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음에도 ‘38선 근처’에서 설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패배와 북한의 승리를 주장했고, 서부의 38선 이남 지역 점령을 ‘신해방지구’라고 강조한 것은 물론이고, 피점

<sup>99)</sup> 전략촌(재건촌과 통일촌)의 건설과 마을의 구조, 주민 경험 등에 대해서는 정근식·한모니까·강인화·전원근,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참조.

<sup>100)</sup> 위와 같음.

령 지역이 많은 중동부 일대에 대해서도 ‘패배나 피점령’의 측면보다는 ‘전략적 요충지나 적의 중요 진지 탈환’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북한은 정전의 공고화와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했다는데, 이는 단순한 구호라기보다는 교전의 재발 방지와 전후 복구 건설이라는 현실적인 시급성과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교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전협정 준수와 복구 건설의 추진은 곧 북한에게 ‘평화의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은 당시 남한이 휴전 반대와 전투 계속을 주장하고 정전을 ‘굴욕’이라 인식하면서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둘째, 정전 직후, 북한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구 정책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 옹진-개성에 이르는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신해방지구’라고 명명하면서 이 일대의 역사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거나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고, 이를 곡물 증산과 운송에 활용했다. 심지어 농업생산량 증가를 위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개간까지 착수했고, 인근 주민들은 북방한계선 안팎을 오가며 논밭을 일구었다. 전시 전투 및 폭격의 집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강원도 일대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및 각종 물자 지원 정책을 펴는 동시에 ‘주요 고지 탈환 및 고수’라는 ‘승리’의 경험을 부각했다.

셋째, ‘비무장지대 분계선 인접 지역’은 그야말로 ‘전선 지구’였다. 이곳 주민들은 전선이 교착되었던 2년 동안 영농과 전선 원호를 병행했는데, 무기와 부상군인을 옮기는 등 전투 현장에도 동원되었다. 전시 전투 지원과 영농 병행의 경험은 전후 이 일대의 농업 협동화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서부 지역과 중동부 지역의 농업 협동화 과정은 차이가 있었다. 전전 남한의 통치를 받았다가 전시 북한에 편입된 서부 지역의 농업 협동화는 여러 굴곡과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고, ‘전선 공동 작업대’라는 전선이 있던 강원도 일대의 협동화는 처음부터 제3형태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듯, 북한의 비무장지대 인접 마을들은 한국전쟁의 과정과 결과로



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남 선전전의 차원에서 조성되었다기보다는 북한의 내적 필요성과 전체적인 사회 변화의 결과로서 만들어졌다. 이는 남한의 민북마을과도 차이가 있었다. 남한의 접경지역은 기본적으로 민간인통제선에 의해 원주민의 접근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북측 접경 마을보다 늦은 시기에 주민의 재정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영농 활동과 군사적 기능을 겸하면서, 생산수단 소유나 공동 생산분배를 지향했던 측면은 북한의 접경 마을들과 남한의 전략촌이 유사했으며, 오히려 북한의 접경 마을들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 접수: 2021년 4월 30일 / 심사: 2021년 5월 24일 / 게재확정: 2021년 6월 7일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 전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보영, 『전쟁과 휴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미육군성 군사감실 편찬, 육군본부 역, 『유엔군전사 제2집: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육군본부, 1968.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1961)』, 서울: 선인, 2005.
- 손기웅 외 지음,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3): 정책제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손기웅·최수영·최경수 공저,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이정훈 외, 『트윈시티모델에 기반한 남북한 접경지역 분석과 발전 전망』, 경기연구원, 2019.
- 이정훈 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경기연구원, 2019.
- 정근식·한모니까·강인화·전원근,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군사편찬위원회, 2006.
- 고광도, 「귀농선 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졸업논문, 1967.
- 오규열, 「중공군의 상감령(上甘嶺)전투에 대한 재평가」 『군사』 46, 2002, 31~59쪽.
- 이준희, 「1950년대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업협동화 : 10월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7, 2017, 481~517쪽.
-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제임스 메트레이, 「한국전쟁 휴전협상: 원심작용적 협상 전략?」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09쪽.
- 한모니까,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0, 2015, 233~264쪽.
- 한모니까, 「남북한 ‘수복지구’·‘신해방지구’ 주민 편입 비교—국민/인민 전환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23, 2018, 415~453쪽.

한모니까, 「1950년대~1960년대 민간인통제선(CCL)의 변화와 '민북(民北)마을'의 형성」 『북한연구학회보』 24, 2020, 59~92쪽.

홍석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84, 1994, 137~180쪽.

홍용표, 「전쟁 전개과정에서의 한·미간의 갈등: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연구회,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209~228쪽.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연감(1953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농업 협동화 운동의 승리』 1·6, 평양: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1958.

리정근·리병렬, 『원한의 군사분계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제27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선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 『근로자』 1953년 제8호.

김일성, 「모든 것은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근로자』 1953년 제9호.

김일성, 「지방행정체계와 행정구역을 개편할 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2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2.11.27), 『김일성저작집』 제7권, 379~381쪽.

한국모, 「리인민위원회의 사업강화를 위하여」 『인민』 1953년 제3호, 47~48쪽.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문서(RG 242, Captured Korean Documents)

- 「개성 개풍 등 해방지구에서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1951.12.24), 『북한관계사료집』 제2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남연백인위 제187호 전재민 및 령세농가 조사에 대하여」(1951.6.3), 『북한관계사료집』 제1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용진 및 남연백군 당단체들과 정권기관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결정서」(1951.12.24), 『북한관계사료집』 제2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조선로동당 황해도 용진군 용진면 은과분주소 분세포총회」(1952.4.19), 『북한관계사료집』 제1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황해도 내무부장 지령: 비적 수색사업 강화에 대하여」 RG 242, Box 114, Doc. 203615.

『로동신문』, 『개성신문』, 『황해일보』

『동아일보』(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 By Date.nhn)

「북한은 지금 北 선전마을의 실체는?」 MBC 통일전망대, 2016. 6. 20.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4003646\\_29114.html](https://imnews.imbc.com/replay/unity/4003646_29114.html)

「변화하는 북한 선전마을」 『연합뉴스』 2020. 10. 30.

<https://www.yna.co.kr/view/PYH20201030091100060>.

「제19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속기록 제16호: 단기428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1954.10.16), 15~16쪽.

RG 218, Korean Armistice Agreement, 1953-1953, Armistice Agreement Volume 2, Maps, NARA.

## DMZ Border Areas and North Korea's Postwar Reconstruction

Hahn, Monica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a study of the North Korean side of the DMZ border areas. It extends its research subject to the norther side of the DMZ border areas and investigates the formation of the North's border areas in the 1950s, as well as attributes of the areas. By doing so it attempts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ter-Korean border areas. In order to do so, this article cross-analyzes North Korean newspapers from the 1950s, North Korean documents seized by US forces, comprehensive data from North Korea's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and Armistice Agreement maps.

The formation of North Korea's DMZ border areas was the result of experiences during the Korean War and North Korea's internal necessity of postwar reconstruction. First, North Korea recognized the ceasefire of the Korean War as a victory for themselves, as well as the first step towards peace, and insisted on consolidating the ceasefire. This was not a simple propaganda slogan, but rather evidence of the vast amount of destruction that North Korea had suffered during the war and was an extremely substantive issue when it came to surmounting the devastation of the war. Second, in emphasizing the role of residents who were mobilized for the

frontlines and the fixed Military Demarcation Line as ‘victors’ and ‘heroes’, North Korea was able to win public sentiment and actively use them for the swift restoration of the border areas. Third, though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in the North’s border areas did follow the Soviet Union’s kolkhoz model, it was also directly rooted in the organizational experience and frontline relief efforts during the Korean War. The experience of residents of these areas maintaining their farmlands while simultaneously providing combat support while the war was still underway was a decisive factor that accelerated postwar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These second and third characteristics appear even more prominently in the middle and eastern regions of the border areas in Gangwon-do, in which many areas were captured and occupied by South Korea, than in the western border regions occupied by North Korea (known as ‘Newly Liberated Areas’).

KeyWords: Korean War, Demilitarized Zone(DMZ), Border Region,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Postwar Reconstruction, Civil Control Zone

---

**한모니까(Hahn, Monica)**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주요 연구주제는 한국전쟁과 남북 접경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 분단과 통일 평화 문제이다. 최근 논저로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냉전사의 응축 공간 DMZ: 열전에서 ‘평화 없는 평화’까지」,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Reclaimed Areas and Newly Liberated Areas: Understanding the Borderlands of Division as the Testing Grounds for Reunification” 등이 있다.